2010년 국정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 추진계획

시정·처리 요구사항	시정·처리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
○ 노인인구가 점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령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중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할 것	○ 노인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 및 정보 제공 - '10년 교육 실시(86회) 및 "고령자용 건강용품 안전실태조사" 등 실태조사 실시(8회) 후 정보 제공 ○ 노인소비자 대상 교육 강화 - 방문판매법 리플렛 제작 등 노인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- 지자체·소비자단체 연계를 통한 소비자교육 및 이동상담 실시 ○ 노인소비자보호 관련 연구 실시 - 노인소비자 피해 문제점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(노령층 대상 물품·용역거래실태 및 소비자보호 방안)
○ 생필품 가격정보 사이트(T-price: Trust-price) 운영 관련 - 정기적으로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	○ 생필품 가격정보 사이트의 인지도, 유용성, 신뢰성, 이용편의성 등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실시('10. 11월) - 전국 성인 소비자 1,650명 대상 ○ 소비자만족도 조사 결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이용편리성과 시의적절성 분야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및 만족도 조사 실시 ('11.4분기)
- 전국 비교는 가능하지만 품목별로 동일지역 내 위치한 각 판매점별 가격비교가 쉽지 않은 점을 개선할 것	○ T-Price 사이트 개편하여 행정단위별(시·군·구) 판매점간, 업태간 가격비교 및 최저가 검색 가능 ○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 현재 위치 기반의 판매점 검색 및 미리 설정한 품목 찾기 등의 기능 서비스 제공
○ 소비자원의 정부정책 제도개선 건의내용이 제대로 점검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책반영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	○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소비자원의 부처별 대정부 건의현황 반영현황 보고 등 공정위와 협의하여 방안마련('11.3분기) ○ 소비자정책 분야에서의 정책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분야별 정책자문위원회 활용 활성화(연중)
○ 지방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한데,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	○ 부산시, 대전시 및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공동 세미나 개최 등 지방소비자 권익 강화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 - '10년 예산 235백만원중 218백만원 집행(92.8%) ○ '11년 지방소비자 권익 증진 사업의 집행률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속 관리
○ 사업비의 과도한 절감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는 것은 사업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인건비 및 경상절감비 운영 등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을 경주할 것	○ '10년 퇴직급여충당금 추가 적립시 인건비 및 운영비 우선 활용 - 인건비 183백만원, 인센티브예비비 347백만원, 운영비 98백만원을 활용하여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○ 향후에도 인건비, 운영비 등 경상경비 중심의 절감을 통해 부족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- 예산절감 계획 수립 및 연중 관리 ○ 수탁용역수입의 수익발생분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
○ 소비자의 안전확보와 분쟁원인 규명에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시험검사 설비 교체와 인력확충 등 시험검사 인프라 개선에 만전을 기할 것	○ '14년까지 10년 이상 노후 시험설비 교체 및 소비자 문제 대응을 위한 신규설비 도입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('10.2월) ○ 시험검사 전문인력 3명 충원('10.12월)